'산사태 막는다' 도내 취약지 전면 점검 나서

전북자치도, 해빙기 취약지역 2714개소 전수 점검… 우기 대비 선제 대응 기반 구축

사방사업 300억원 투입 · 산림재난대응단 706명 운영… 현장 대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해빙기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산사태취약지역 2,714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해빙기 대비 전수 점검을 진행하며 산림재난대응단 706명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25건, 보수·보강 7건을 즉시 정비하는 등 선제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1,008개소로 확대해 기존 취약지역뿐 아니라 잠재 위험지역까지 포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기상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예측정보를 활용한 ICT기반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운영해 강우량, 토양수분 등 현장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도를 사전 분석하고, 위험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구조적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도 추진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300억원을 투입해 사방댐 31개소, 계류보전 15km, 산지사방 16ha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 ~10월 15일)에는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주민대피지원단 등을 활용해 위험지역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변화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부터 예측, 현장 대응, 주민 대피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리금융그룹,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도,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본격화

핀테크 스타트업 7개사 선정… 기업 집적화로 혁신 금융거점 도약

최대 3500만원 사업화 지원… 혁신금융 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도는 우리금융그룹,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7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7년 이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선정 기업에는 최대 3,5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함께 창업 공간,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혁신금융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우리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노랩(DinnoLab)'과 연계해 투자유치와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계열사 협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십일리터 △데일리페이 △토리에듀핀 △리브애니웨어 △지투시그마 △딜미 △머니가드서비스 등 7개사로, AI 기반 보험, 공급망 금융, 비대면 인증·결제, B2B 정산 인프라, 크로스보더 결제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도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기업과 도내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이 포함되면서 전북의 금융산업 육성 정책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토리에듀핀은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투시그마는 도내로 본사를 이전해 지역 정착 사례로 주목된다.

도는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기반도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제출한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KB국민·신한·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블랙록과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금융혁신 스타트업을 지속 발굴하고, 도외 기업의 본사 이전을 적극 유도해 핀테크 기업 집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을 디지털 혁신 금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만호 기자

도내 하천 불법시설 전수조사 철저 |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완주 동상 찾아 현황 점거

전북특별자치도는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완주군 동상면 일원을 직접 찾아 하천 불법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행정을 펼쳤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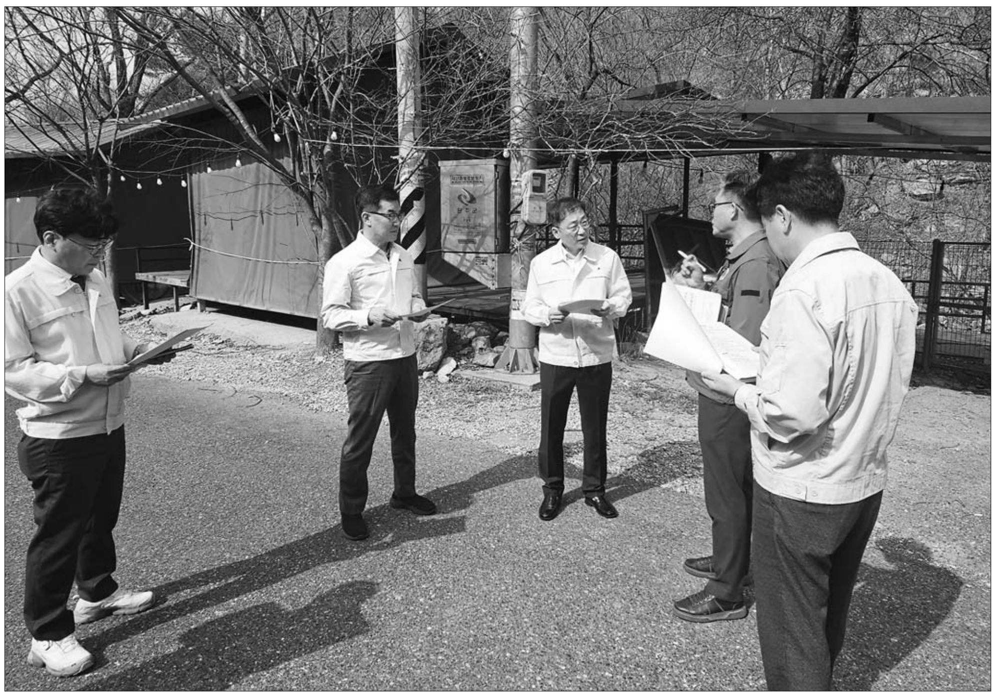
정부의 하천 등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지침에 따라 3월 말까지 진행 중인 1차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살피고, 원상복구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철저한 전수조사를 위해 시군별 조사 실적을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강력한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지방하천은 물론 소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사익을 위해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빠짐없이 조사해 신속하게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7일 완주군 동상면 일원을 직접 찾아 하천 불법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다.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도, 7200여만원 현장 징수

완주 · 장수 · 무주 · 부안

진안 등 5개 군과 합동 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2,4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도, 종량제 봉투 공급 비상대책 가동… 사재기 차단 '총력'

도내 종량제 봉투 평균 재고 829만 매… 약 150일분 수준 확인 · 불필요한 구매 자제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폴리에틸렌 수급 우려와 일부 지역의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자, 안정적인 봉투 공급과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 26일 시군 담당 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종량제 봉투를 둘러싼 도민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수립했다.

이날 시군별 재고 현황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도내 전체 평균 재고량은 829만 매로 약 150일분에 해당해 전반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일시적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전주시, 군산시는 신속한 수급 안정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300만 매, 군산시는 약 103만 매를 긴급 제작 중으로, 공급이 완료되면 각각 70일·82일 이상분의 물량이 즉시 확보된다.

도는 원료 비축에 여유가 있는 시군과 부족한 시군 간 상호 조정을 통해 봉투 제작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확보된 재생원료는 2만5,700톤으로, 종량제 봉투 약 18억3,0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원료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아닌 만큼 도민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만큼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자 가격이 유지되며, 도는 사재기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없는 만큼 불필요한 구매 자제를 촉구했다.

유통 현장의 은닉·매점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봉투 공급에 이상이 없고 가격도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도민의 심리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투명 봉투 무상 수거 또는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전환하는 비상 수거 체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질서 확립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판매소의 봉투 은닉·재고 매점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혼란 재발을 차단할 방침이다. 봉투 공급과 가격 모두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각종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도민 불안의 근본 원인도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만호 기자

도, 재생에너지 주택지원 확대… 총 사업비 20억원 규모

태양광 · 지열 등 설치비 지원… 내달 14~15일 선착순 접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총 사업비 20억원 규모로,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해 도민의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 등)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에너지원별로 접수 일정이 구분된다. 태양열·지열·소형풍력은 4월 14일, 태양광은 4월 15일부터 접수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설비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태양광은 3kW 이하 기준으로 국비 165만 원과 도비 30만 원이 지원되며, 태양열은 14㎡ 기준 국비 904만 4천 원, 도비 56만 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특히 도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 참여 의지와 설치 수요,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시군별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며, 예산 규모는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

사업은 신청자가 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설비 설치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도는 올해 상반기 정부 추경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분야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국비 상황에 맞춰 도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노후 연구장비 성능개선 지원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공공 연구장비의 성능 개선과 재활용을 지원하며 연구개발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는 데 나선다.

전북테크노파크는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노후 연구개발장비를 대상으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활용 연구개발장비 성능향상·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장비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돼 공동 활용 중인 연구개발장비 가운데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수리가 필요한 장비다. 총 2개 기관이 선정되며, 기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은 전체 비용의 50% 이내로, 나머지는 해당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장비 수리와 핵심 부품 교체 등 유지보수뿐 아니라 성능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자세한 내용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와 장비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해외유입 모기 집중 감시… 감염병 선제 대응

도,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유입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4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기·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분포와 병원체 보유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측하고, 신속한 방역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종전 도내 대학에서 수행해오던 감시사업을 이어받아 2024년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전북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로 지정된 이후 도내 주요 지점에서 매개체를 지속적으로 채집·분석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검출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2년 연속 털진드기에서 쯔쯔가무시균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감염병 유행 예측과 예방 홍보, 방역 조치로 이어지며 지역사회 보건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 감시사업은 모기 감시를 중심으로 한층 강화된다.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모기 감시는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되며,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감시기법도 도입된다. 아울러 일본뇌염,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등을 매개할 수 있는 '열대집모기'의 도내 유입 및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여름철 집중 조사도 새롭게 추진된다.

진드기 감시도 병행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참진드기 조사는 4월부터 11월까지, 쯔쯔가무시증 유행에 대비한 털진드기 감시는 8월 말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또한 야생 설치류 포획을 통한 병원체 감시와 자원화 사업을 병행해 다각적인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경식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매개체 감시는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역 기반"이라며, "정밀한 감시와 신속한 분석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